회의자료
'16.5.20(금), 16:00~18:20, 국민대통합위원회(19층)

함께하자! 대한민국

『2016 화합과 상생 포럼』 제1회 정기포럼

2016. 5. 20.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목 차 Contents

▌『2016 화합과 상생 포럼』 제1회 정기포럼 개최 개요 ····· 1

▌ 발제문 ····· 5

저성장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저성장 시대의 사회통합 과제

(곽노성 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2016 화합과 상생 포럼』 제1회 정기포럼 개최 개요

▣ 개최 취지

○ 저성장 시대에 수반되는 **사회 변화 양상과 파생될 갈등이슈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발굴**

○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경제관·사회관·시민의식의 정립**과 **공동체적 협력과 공존을 위한 과제 모색**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 5. 20(금), 16:00~18:20, 대통합위(19층 대회의실)**

○ **주제 : 『저성장 시대, 상생과 공존의 과제』**

- 1차 세미나 : "저성장 시대, 그 출구로서의 사회통합"

○ 사회 : **이 영 훈 교수(서울대학교, 『화합과 상생 포럼』 회장)**

▣ 세부 계획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6:00-16:10	인사말씀	**한광옥** 위원장
16:10-16:50	〈발제 1〉 "저성장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전문가 발표
	〈발제 2〉 "저성장 시대의 사회통합 과제" (곽노성 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16:50-18:10	〈종합 토의〉	포럼위원 전체
18:10-18:20	차기 포럼 논의 및 공지사항	포럼 회장
18:20-	만찬	

〈붙임〉 **정기포럼 기획 방향**

○ **아젠다 : "저성장 시대, 상생과 공존의 과제"**

○ **취지**

- 세계 경기 침체와 국가 경제의 성장 둔화 속에서 부의 분배와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사회갈등 심화가 예견됨
- 저성장 시대에 부각되는 주요 갈등 국면을 조망해보고 국민 통합을 위해 풀어야 할 갈등해소의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관·사회관을 정립하고 각 사회 계층의 협력과 공존의 패러다임 모색하고자 함

○ **진행 계획**

- 거시 이슈인 만큼 연속성을 가지는 기획포럼으로 진행

  * 기존에 저성장 관련 논의가 주로 경제 · 복지·고용 축으로 접근, 본 포럼에서는 사회 통합적 과제를 고찰
  * 포럼 4대 활동 영역 중 저성장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계층갈등 · 세대갈등 주제와 연계하여 추진(1차 : 개괄 접근, 2 · 3차 : 각론 접근)하며, 발표 및 토론은 전체 포럼 위원이 참여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섭외

-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별도 보고서 작성 및 확대 논의의 장 마련

○ **세부 계획**

- 연간 3회 개최(5월, 7월, 9월)

회차	주제(잠정안)	발제자
1차 (5.20)	**"저성장 시대, 그 출구로서의 사회통합"** - 저성장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 저성장 시대에 풀어야 할 사회통합의 과제	김용하 교수 곽노성 교수
2차 (7월)	**"저성장 시대의 공존 패러다임을 찾다 1"** - 저성장 시대의 계층갈등 이슈와 극복방안	세미나 세부주제 및 발제자는 추후 결정
3차 (9월)	**"저성장 시대의 공존 패러다임을 찾다 2"** - 저성장 시대의 세대갈등 이슈와 극복방안	

[참고]

화합과 상생 포럼위원 명단

연번	구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회장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1	계층화합분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분과장
2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성근	
3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신	간사
4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5		ＫＤＩ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위원	박진	
6		한국사회공헌연구원	원장	이상래	
7		서울신문	부국장	진경호	
8		문화일보	논설위원	황성준	
1	세대화합분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분과장
2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호	
3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나태준	간사
4		서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남경희	
5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박주병	
6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신중섭	
7		동아일보	기자	이정훈	
8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1	이념화합분과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류석춘	분과장
2		미래한국	발행인	김범수	
3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영환	
4		장로회신학대학 신약학과	교수	김철홍	
5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박상봉	
6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방민석	간사
7		아시아투데이	부장	최영재	
8		동국대 법학과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한희원	
1	지역화합분과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신도철	분과장
2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권경득	
3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학린	
4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선희	
5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임동진	간사
6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차미숙	
7		국민일보	국장	최현수	
8		시대정신	상임이사	홍진표	

함께하자! 대한민국

발 제 문

김 용 하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곽 노 성 교수(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발제문 1

저성장 사회의 위기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1 서언

최근 IMF가 발표한 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513달러로 2014년에 비해서 457.6달러가 감소하였다.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감소하면서 계층 간·지역 간·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등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분배에 필요한 충분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우리 경제 사회 프레임으로 국민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 내외의 실질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은 이 정도의 경제성적표에 만족하기 어렵다. 최근 국민이 복지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기는 하지만 더욱 깊은 내면에는 저성장에 기인하는 팍팍한 생활형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헬조선, 흙수저 등과 같은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불안·불만·불신이 팽배하고, 심지어는 염세적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의 저성장 문제는 해결가능성 측면에서 낙관할 수 없다. 잘 나가던 중국 브라질 등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석유 등 에너지와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기조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성장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는 가속되고 있어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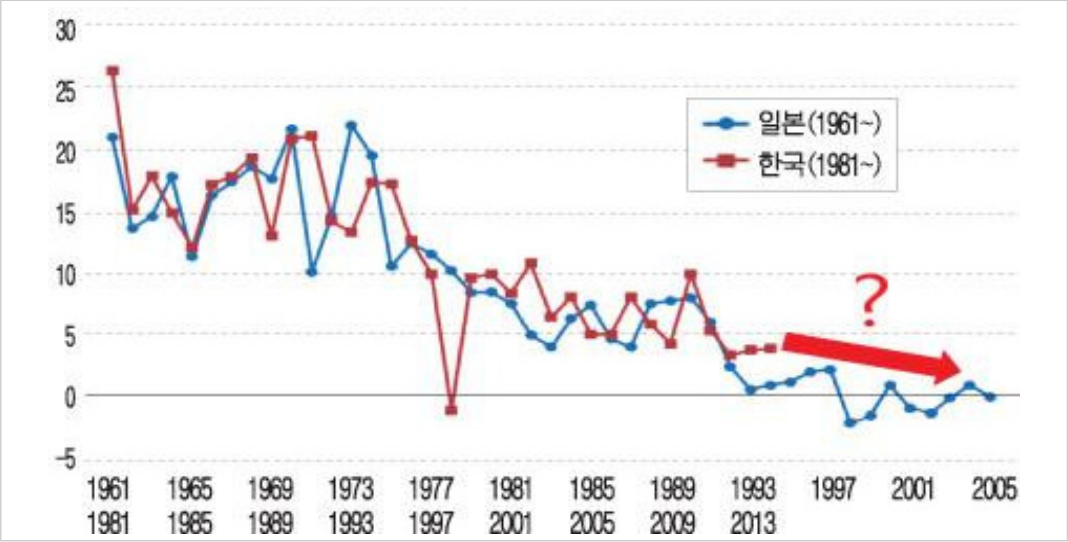
본 고는 정신문화적 요소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을 통하여 경제적 측면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거함과 함께 동일한 경제적 수준에서 국민행복이 더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1]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성장상태에서도 안정적인 균형 구조에 대한 국민인식 공유가 가능하다면, 저성장 상태에서도 고성장시대 만큼은 아니라도 필요이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저성장 현상과 대응의 한계

2015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역시 경제전망이 밝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8~9%대를 유지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4%대 후반으로 떨어진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대 후반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2~2017년 3.4%에서 2018~2030년 2.4%, 2031~2050년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1] 한국 일본 경제성장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내일신문(2015. 12. 31자)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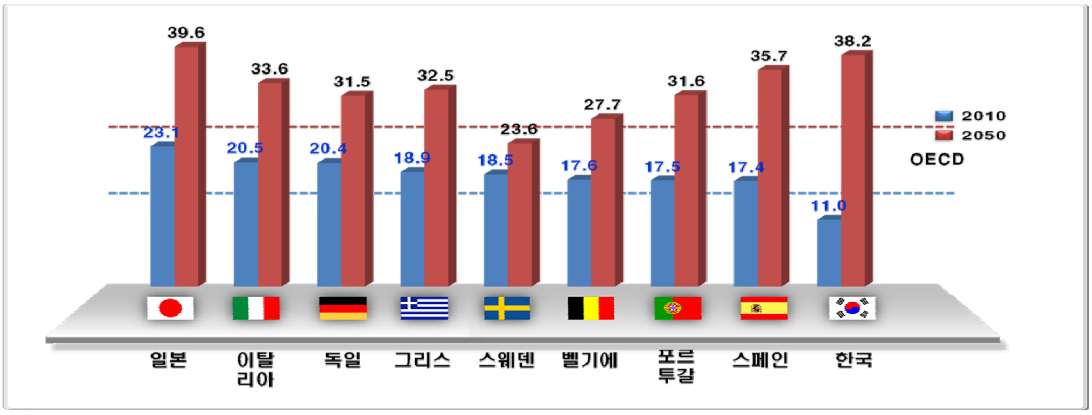
1) 김용하,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 실천방안", 한국선진화포럼, 2016. 3 토론회 원고를 기초로 재작성한 것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거시경제 변수로 보면 노동인구 공급 둔화, 근로시간 감소, 설비투자 부진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것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OECD 전체의 약 두 배이며,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73% 수준으로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5~10년 내에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성장 추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의 붕괴를 계기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장기간 성장률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전초전에 불과하고, 일본형 장기 침체는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다. 그리고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성장률의 둔화 현상은 최근 몇년간의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제조업의 성장률 둔화, 사회갈등의 확대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 추세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둔화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율이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2050년경에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소득분배이전의 지니계수가 급격히 높아졌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15년 13.%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2] 노인인구비율 국제비교(2010, 2050)

(단위: %)



자료: OECD, 「OECD 2010 Factbook」.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과 서비스업의 더딘 발전도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제조업만의 성장으로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성장률이 지체되자 성장없는 고용현상으로 전화되고 있다. 성장없는 고용의 원인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부진 때문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5년 이후 59%대에 머물러 80%에 육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고, 국내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의 명목 GDP 비중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69.5%)은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 규모에 비해 고용 비중이 높아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71% 선에 불과하고 저생산성의 주원인은 진입 장벽이 낮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전통 서비스 업종에서 규모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지출 구성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서비스부문에서 숙박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엥겔 법칙(Engel's law)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지수가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고소득 가계는 지출에서 차지하는 식품비 비중이 작다. 생존에 덜 필수적인 의류나 문화생활 등에도 돈을 쓸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엥겔지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엥겔지수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엥겔지수가 꽤 반등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외식비가 차지한 비중은 26.1%였다. 매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26.3%) 이후 최고치다. 1990년 상반기 32.9%에 달했던 엥겔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 25%대에 진입했고 2014년(25.6%)까지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소득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가계 식품비가 전년 동기보다 2.1% 늘어나 소비지출 증가율(0.3%)을 크게 넘었다. 식료품비의 지출 양상을 보면, 우리 경제가 물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만 정신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비용이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고, 이 때문에 지급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늘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것도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측면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경제성장율은 하락하는데 인구밀도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가능인구 대비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 부양률은 지난 50년과 향후 50년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조건이지만, 인구밀도를 보면 1970년에는 1㎢ 당 328명에서, 1980년에는 385명, 1990년에는 432명, 2000년에는 487명으로 높아졌고 2014년 현재는 513명으로 높아졌다. 에너지 등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식량자급율도 25%에 안 되는 국토 상황에서 인구수는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획기적인 innovation이 일어나지 않은 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3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에 대한 재 고찰

역사적으로 어떠한 국가도 영원히 성장을 끊임없이 하였던 국가는 없다. 성장률의 장기적 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저하하는 국면에서도 대응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행복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있지만 인간의 행복이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국가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GDP라는 지표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GDP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경제활동과 그렇지 않은 경제활동을 구분하지 못한다. 실업으로 인한 정부지출과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GDP를 증가시키지만, 환경오염 같이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래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인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UN)산하 '지속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는 지난 2012년부터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1인당GDP,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등에 대한 갤럽세계 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어 세계행복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UN 행복보고서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행복방정식을 추정하고 있다. 행복도는 1인당 GDP, 건강수명과 같은 정량적 지표와 사회적 지원, 선택자유, 관용, 부패 등 정성적 지표와 높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201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은 58위를 기록하여 2015년의 47위에 비하여 11계단이 하락했고, 2013년과 비교해 17계단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GDP 순위는 행복지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세계행복보고서는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가 10위권에 속하고 있다. 복지국가로 통칭되는 북유럽의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한편 미국 13위, 영국 23위, 독일 16위, 프랑스 32위 였고 한 일본 53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연환경이 좋은 국가와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최근 몇 년간 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을까? 행복도가 하락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1위인 덴마크,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성장모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독일, 우리나라의 성장모델과 가장 유사한 선진국인 일본의 행복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표 1〉 UN 행복함수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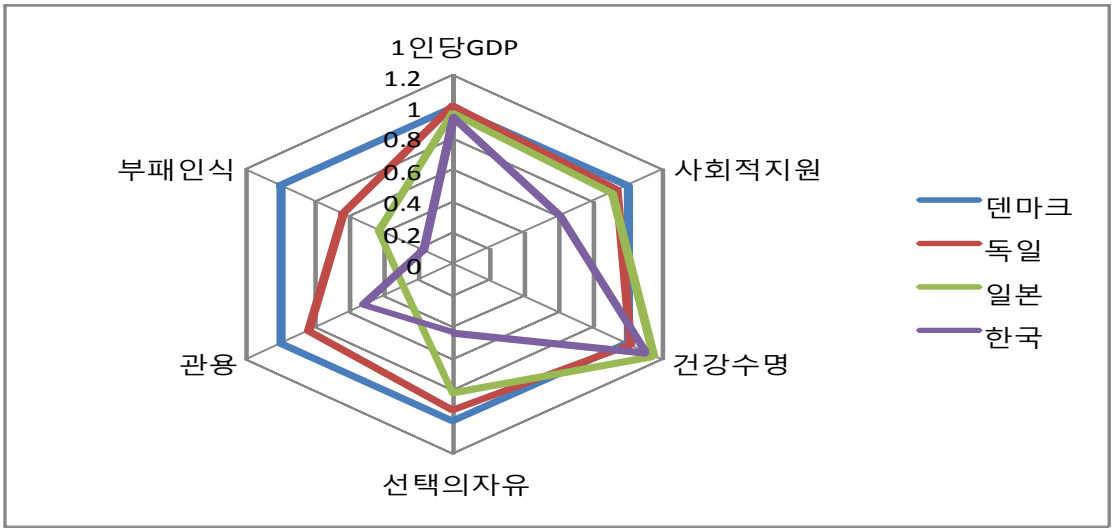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antril Ladder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Cantril Ladder
Log GDP per capita	0.338 (0.059)***	-0.002 (0.009)	0.011 (0.008)	0.341 (0.058)***
Social support	2.334 (0.429)***	0.253 (0.052)***	-0.238 (0.046)***	1.768 (0.417)***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0.029 (0.008)***	0.0002 (0.001)	0.002 (0.001)*	0.028 (0.008)***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1.056 (0.319)***	0.328 (0.039)***	-0.089 (0.045)**	0.315 (0.316)
Generosity	0.820 (0.276)***	0.171 (0.032)***	-0.011 (0.030)	0.429 (0.277)
Perceptions of corruption	-0.579 (0.282)**	0.033 (0.030)	0.092 (0.025)***	-0.657 (0.271)**
Positive affect				2.297 (0.443)***
Negative affect				0.050 (0.506)
Year fixed effect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ber of countries	156	156	156	156
Number of observations	1,118	1,115	1,117	1,114
Adjusted R-squared	0.741	0.497	0.226	0.765

Notes: This is a pooled OLS regression for a tattered panel explaining annual national average Cantril ladder responses from all available surveys from 2005 to 2015. See Technical Box 2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of the predictors. Coefficients are reporte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country in parenthese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percent levels respectively.

자료: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6』, 2016

먼저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1인당 GDP 변수는 한국이 덴마크 독일 일본에 비하여 뒤지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건강수명의 경우 덴마크와 독일과 비교하여 오히려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과 거의 비슷했다. 즉, 객관적인 정량지표 측면에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측면 등 정성적 지표들에 있어서는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서는 뚜렷한 차이는 나타내었고, 일본과 비교할 때도 관용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소하게 양호했지만 다른 지표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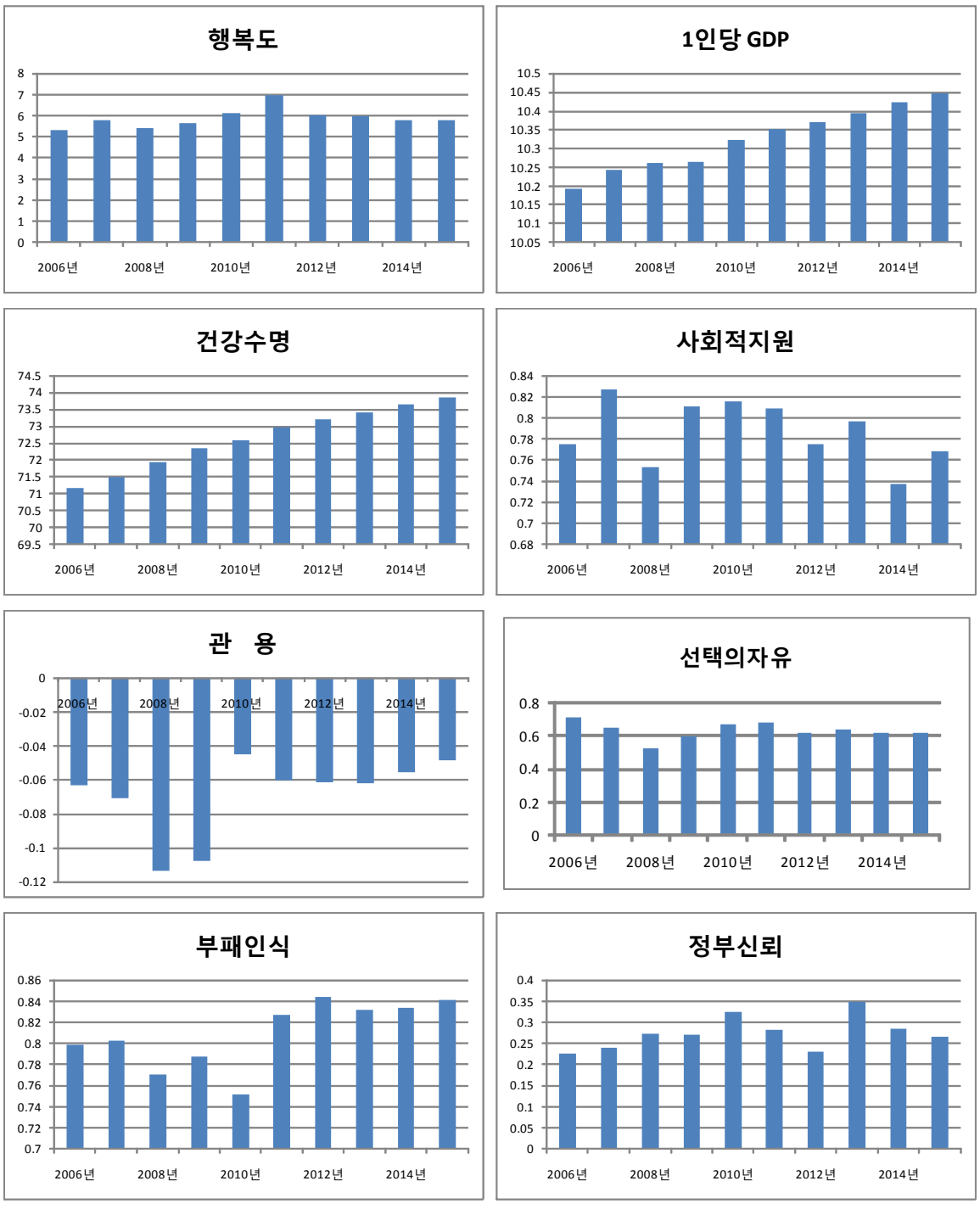
[도 3] 행복도 결정요인 국가비교 (동일 측도)



즉,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었고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방사선형 그림표 상으로는 덴마크와 독일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복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관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높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만큼 팍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행복도에 영향을 각각 지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행복도 2011년 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0점 기준으로 6점 이하로 떨어졌다. 1인당 GDP와 건강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2007년을 정점으로 등락하면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용은 2008년을 밑점으로 하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고, 선택의 자유 역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패인식도 2011년 높아진 이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는 행복방정식에 포함된 변수는 아니지만 2013년에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2년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행복도가 하락은 경제적 요인이 아닌 사회연대 결여, 부패, 사회갈등, 선택의 제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4] 한국의 행복의 결정요인 연도별 추이



행복도 1위 국가인 덴마크를 1.0으로 볼 때 국가별로 각 지표 상대적 위상을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요인 등 정량적 지표의 경우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 정성적 지표측면에서 한국의 지표는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복도를 결정하는 정성적인 지표의 경우,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행복도 행복도를 결정하는 각종의 요인별로 각각 행복도가 가장 높은 덴마크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할 때 행복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 독일 일본의 행복도와 행복도를 결정하는 각 변수의 기여도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먼저 1인당 GDP 수준이 1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위에서 55위로 3계단 상승한다. 사회적지원 수준이 1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위에서 40위로 18계단 상승한다. 선택의 자유 수준이 1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위에서 44위로 14계단 상승한다. 관용수준이 1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위에서 47위로 11계단 상승한다. 부패인식 수준이 1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위에서 43위로 15계단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표를 제외한 사회적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 등의 4개 지표 모두가 1위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8위에서 12위로 46계단 상승한다. 이렇게 볼 때, 국민행복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적 수준이 반드시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행복 선진국 수준으로 행복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행복도 결정요인별 행복도 순위의 변동 가능성

국가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잔차	행복도	국가 순위
덴마크	1.441784	1.163745	0.79504	0.579413	0.36171	0.444532	2.73939	7.525614	1위
독일	1.447867	1.097739	0.814869	0.534662	0.304523	0.285508	2.509306	6.994473	16위
일본	1.380073	1.060542	0.914911	0.467607	0.102243	0.189853	1.80584	5.92107	53위
한국	1.359477	0.721935	0.886449	0.251681	0.188236	0.077156	2.350147	5.835081	58위
1인당 GDP	1.441784	0.721935	0.886449	0.251681	0.188236	0.077156	2.350147	5.917389	55위
사회적 지원	1.359477	1.163745	0.886449	0.251681	0.188236	0.077156	2.350147	6.276891	40위
선택의 자유	1.359477	0.721935	0.886449	0.579413	0.188236	0.077156	2.350147	6.162813	44위
관용	1.359477	0.721935	0.886449	0.251681	0.36171	0.077156	2.350147	6.008555	47위
부패 인식	1.359477	0.721935	0.886449	0.251681	0.188236	0.444532	2.350147	6.202457	43위
사+건+ 관+부	1.359477	1.163745	0.886449	0.579413	0.36171	0.444532	2.350147	7.145472	12위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을 보면,'국가경제의 핵심 실적 지표(NKPI)'로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 최하위에 이르기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이른바 산업선진국)에 속했다. 이 비교에서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다.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지는 점이다.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rents: 독과점적 이익)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학 용어인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소득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국의 실질소득 형평성이 추락하는 원인이라고 WEF는 설명했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WEF는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분야에 걸쳐서도 평가했다. 한국은 선진 30개국 가운데 교육 부문에서 상위 20%인 1등급이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권이었다. WEF는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실제노동 인구비율은 평범하다면서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전반적 갈등구조의 해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신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행복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평가되는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프레임과 관계가 있다. 한국은 70년의 짧은 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한 모범적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인의 우수한 자질과 근면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잘 짜인 효율적인 국가 프레임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의 한계가 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개혁하지 않는 한 국민행복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 문화 융합 선진화가 시급하다.

4 경제와 정신 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

가. 기본방향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의 문화는 문명(civilization)이란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문화는 정신적 발전 상태를, 문명은 물질적 발전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된다[2]. 매슈 아놀드(Mathew Arnold)는 문화를 인간 사고와 표현의 뛰어난 정수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위대한 문학,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한 정신적 완성의 추구라는 열망이 담겨 있다. 예컨대 우리가 문화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 흔히 그것은 뛰어나고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그 문화의 개념이 그것이다. 문화 변동은 한 순간에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지속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문화 변동 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새롭게 출현한 문화간의 모순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물질 문화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문화가 충분히 적응하지 못 하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문화 지체 현상이 있을 때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은 외형적인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의 이면에, 내적인 불안정성에 따른 시스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힘들고 불안하다.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2)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교수는 이러한 우리 모습을 '피로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효율적인 경쟁과 유인 시스템의 이면에 국민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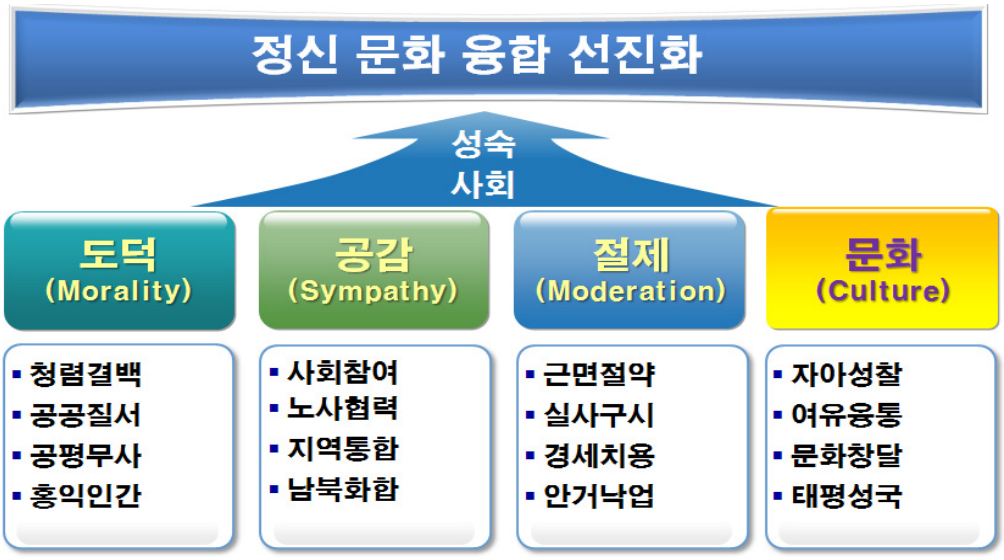
한국의 우월한 성장 프레임은 끊임없는 고도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복지(福祉) 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출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히 복지 예산 확대로 땜질 처방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대증요법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성장 프레임을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 고에서 정신 문화의 선진화는 경제적 선진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신문화적 지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지체되고 있는 정신문화는 현재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Dennis Gabor는 그의 저서 '성숙사회(The Mature Society)'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소비사회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저성장시대하에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전은 함께 잘 사는 성숙한 사회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신 측면에서 도덕적이고(Morality)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감하며(Sympathy)[3], 경제적으로는 절제하여(Moderation), 풍요로운 문화(Culture)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첫째, 도덕사회는 청렴결백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공평무사하여 궁극적으로 홍인인간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공감사회는 사회참여를 통하여 소외를 극복하고,

3) [sympathy, 共感]'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슘파티아에서 유래하는 말로 도덕철학·정치철학 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부상한 것은 18세기 영국에서이다. F. 허치슨(Francis Hutcheson)이 도덕 감각의 하나로서 들고, D. 흄(David Hume)이 동정이나 연민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갖춘 마음의 작용으로 받아들인 것을 계승하여 A. 스미스(Adam Smith)가 『도덕감정론』에서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스미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 개념은 타인의 아픔을 똑같이 아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타인이 어떤 상황하에서 안고 있는 생각을 상징상의 입장교환을 통하여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노사간 협력과 지역간 통합을 통하여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는 사회이다. 경제적으로는 개개인은 근면절약하고, 생활에 있어서 허례허식 없는 실사구시를 생활화하며 경세치용으로 안정적인 물질적 기반을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할 일을 하면서 절제 속에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풍요로운 문화사회는 자아발견과 성찰을 통하여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여유로움 속에서 상호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고 이에 기초하여 풍성한 문화를 창달하여 모든 사람이 평안한 해동성국을 만드는 것이다.



나. 윤리도덕 중시 사회 구축

최근 아동학대나 부모유기 등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붕괴 현상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질만능의 쾌락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주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실종, 흉악 범죄 증가 등 인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성의 부재와 도덕 실종, 가치관의 전도에 따른 것으로 도덕성 회복 운동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참으로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족한 자본주의를 넘어서 정신적 도적적으로 우월한 자본주의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인식도는 매우 낮다[4]. 앞서 설명한 세계경제포럼 2015년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부패문제에

4) 2013년도 세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보면 (높을수록 청렴) 싱가포르(8.6) 홍콩(7.5), 일본(7.3), 타이완(6.1) 한국(5.5) 수준이다.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공중도덕과 공공질서의 준수 역시 미흡하여 높은 교통사고율과 산재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갈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존경받는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재산뿐 만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 국민의 윤리 도덕이 바르게 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실천방안 1 :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운동의 전개

율곡 이이[5]는 선비란 개인의 행복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벼슬을 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모습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선비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유교의 이념을 따른 결과였다. 즉, 선비는 개인의 안일보다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 벼슬을 하는 동안에는 공정한 일 처리로 선비정신을 발휘했고, 벼슬을 하지 않을 때는 학문을 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자신을 수양하는 데 노력했다. 선비정신은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인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나타낸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수준 높은 공동체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이질적인 존재와 다양성을 존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홍익인간으로 대표되는 민본주의 사상을 품고 있으며 자연을 극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정리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외세 개입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동시에 평화적 국제질서를 적극 지지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비정신은 한국인 뿐 만 아니라 전 인류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최상부의 신분계층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비의 개념은 선비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나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가능하다. 이는 그리스 로마시대의 시민은 사실상 제한된 특정계층이었지만 현재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시민이 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에는 시민이 있다면 한국에선 선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비정신은 미래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국민의 상을 淸廉潔白한 마음가짐으로 公共秩序에 순응하여 따르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公平無私하고,

5) 최영갑,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책 브리핑, 2015. 10, 19

궁극적으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세(弘益人間)로 살아가는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우희 교수가 선비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6].

2) 실천방안 2 : 부정부패의 척결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국가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정부의 신뢰도가 낮다. 정부를 불신하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지 않고 따라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의 신뢰가 낮은 근간에는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방산 비리, 핵발전소 부품 비리 등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까지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7]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엄정히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갑을 관계도 청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공무원과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종업원 등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계약관계상의 갑과 을의 관계는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하지만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거 三綱과 같은 수직적 신분관계에 기초한 전통적인 윤리관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易地思之 하는 사회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3) 실천방안 3 :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초질서란, 서로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덕목이자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할 사회규칙으로 교통법규준수, 공중도덕 등 초등학생 이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빨리 빨리'문화와

6) 박우희 교수는 "아직 한국 사회는 경제와 자본주의를 추하게 보고, 경제인들조차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의식이 내면에서 상충하고 있다"며 "지식정보 시대에선 지식을 가진 선비와 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상인이 손을 잡는 '사·상 자본주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국부도 증진시키고 사회 균형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서양의 자본주의도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인'의 개념을 통해 '금욕·절제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안 통과는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법안 통과는 이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2년 7개월 만인 2015년 3월 3일 이뤄졌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하여 질서 지키기는 후순위에 밀려 있었다. 쓰레기 버리지 않기, 새치기하지 않기, 공중예절 잘 지키기, 교통신호 지키기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지침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소위 '깨진 유리창의 법칙' 측면에서도 중요성 있다. 깨진 유리창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를 방치해두면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통사고 대국의 오명도 따지고 보면 바로 최소한 지켜야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등 물질적 수준은 마이카 시대에 이르고 있지만 자동차 문화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대국에 걸맞은 위상과 국격을 갖추려면 스스로부터 실천해 기초질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

다. 저비용·고효율의 복지 인프라로 공감사회 구축

1) 실천방안 1 : 새로운'경쟁 프레임'의 설정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착한 선진화를 위한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난 60년간의 발전과정에서'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상위계층 20%가 물질적 풍요의 80%를 점유하는'2:8 법칙[8]'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9] . 전 방위적,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10] 정글국가로는 선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적 성과주의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의 조화 방안이 필요하다. 경쟁 지향적인 계층은 리더십과 희생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8) 파레토의 법칙 : 20%의 제품이 80%의 매출을 담당하고 80%의 제품이 20%의 매출을 발생시킨다.
9)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1:99 불평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성장도 가능함을 주장한다.
10) Thomas Hobbe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1651년

경쟁 중립적인 중간계층은 국가의 중추로서 땀과 노력을 요구하되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쟁이 어려운 계층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룰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받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2차적 보장 시스템, 기회의 균등과 기여와 희생에 상응한 공정한 1차적 배분 시스템, 다양한 갈등 해결 시스템과 함께 발산 에너지를 융합하는 시스템을 균형있게 구성해 나가야 한다. 착 선진화에 기반이 되는 복지 인프라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2) 실천방안 2 :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 구현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사망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노동·보건·복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사회보장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복지가 고용창출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한다. 넷째, 「제도간 연계」, 「정보화」, 「경쟁과 책임경영」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요자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제도의 효율성 극대화한다. 다섯째,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화되는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있도록 정부-국민, 근로자-사용자, 앙-지방 간에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a. 사회안전망 체계화

선별적·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한다. 사후적·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한다.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 구축한다.

b. 생애주기적 노동·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 구축한다.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종의 보건 및 복지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c.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단순한 현금급여의 제공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되, 노동이 단순히 복지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아닌 삶의 보람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적 급여가 시설이나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을 지양하고 개인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자유롭게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다양화하여 고용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회재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한다. 공공재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 및 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내부시장원리(internal market principle)를 강화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의 낭비를 줄인다.

d.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사회보장시스템을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재정립하여 중복적인 급여와 제도를 통합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統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한다. 노동, 보건, 복지의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하고,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의 노동, 보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과감하게 통합하여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1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2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직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한다.

e.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복지에는 부담이 항상 동반함을 인식하면서, 적정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영역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부담과 급여의 재분배 시스템을 정립하여 형평성과 평등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은 가계와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여 복지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중앙과 지방간에 난립된 비용부담 구조와 정부의 비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재정립한다. 복지가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의 역할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정의 가족부양부담 경감을 통하여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파탄되거나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지역할을 제고한다.

라. 실사구시[11] 경세치용[12]의 절제사회 구축

우리나라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오히려 후퇴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사회적 압박 속에 높은 집값, 과도한 생활비에 시달린다.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는 사치라고 여긴다. 설사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 등으로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미루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탐욕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문화의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실사구시 경세치용의 절제사회'의 추구가 필요하다.

11) 실사구시 [實事求是] :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 실학의 정신으로 김정희 선생으로 대표된다 (두산백과).

12) 경세치용 [經世致用] : 경세는 세상을 경륜한다는 말로, 국가사회를 질서 있게 영위하는 정치·경제·사회의 활동을 가리키고, 치용은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취해가기 위해 적절한 제도와 방법을 갖추고 실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 실천방안 1 : 사교육비 축소

현재 한국은 인구당 대학수가 세계 1위에 속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청소년 인구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청소년의 대학진학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3년 70%대 초반으로 내려서기는 했으나, 미국 64%, 일본 48% 독일 36%에 비하면 아직은 높다. 대학진학률 보다 심각한 것은 좋은 대학에 가기위한 사교육비 지출이다.

한국의 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OECD 0.9%보다 높은 2.8%이다. 학력이 낮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많다. 교육부·통계청은 2015년 한국의 사교육비를 18조2,000억원[13]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24만2,000원이 된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은 매우 높은 반면, 왜 '교육'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다. 대학 진학과 취업은 현실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취업하는 것이지만 괜찮은(decent)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모든 대학 진학자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 획일적인 입시 교육, 지식 암기식 수업, 어렵고 재미없고, 배울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 현재의 교과 내용으로는 각 개인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는 쉽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 풍조의 이면에는 학력간 임금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대졸과 고졸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임금격차는 대학진학 줄 세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고졸 또는 전문대졸 등 학력요건 수준을 낮춰 취업하는 대졸자 비율이 20%에 이른다는 통계를 근거로 KDI는 일자리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청년층 취업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과다한 사교육비로 나타나는 높은 교육열은 근본적으로 학력간 임금격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때 완화가 가능하다. 학벌이 아닌 능력과 기여에 상응한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인식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화는 느리지만 조성되어 가고 있다.

13)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32조9,000억원이고,'학원업 영위 법인 및 개인 입시학원 연도별 수입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은 2010년 13만4988개에서 2015년 13만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원업 총 매출액은 2010년 11조5403억원에서 2015년 12조8773억원으로 11.6%(1조3370억원) 늘었음..

2) 실천방안 2 : 허례허식 척결

여성가족부의 신랑 신부 시부 시모 친정부 친정모 등 6개 그룹별 각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신랑 아버지의 53.5%, 신랑 어머니의 56%가 아들 결혼으로 지출한 비용이 '8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반면 신부 부모는 70%가량이 6천만원 이하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부모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은 10.4%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부모 도움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결혼 비용은 결혼을 미루는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결혼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혼비용은 상당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하지만 그 외에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혼식 비용은 수백만원대부터 억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국의 거품 낀 결혼식은 결혼 자체를 당사자인만의 일이 아닌 가족과 가문의 의례로 체면을 중시하는 풍토와 관련이 있다. 과다한 혼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집안 간에 반목과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절제되어야 한다. 서구유럽은 요즘 결혼식을 생략한 선 부부동거형 결혼 문화가 일반화가 될 정도로 결혼비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진실과 사랑에 기초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야 결혼기피 현상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장례문화도 더 빠르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전국 묘지 현황을 파악 결과에 의하면, 전국 분묘 수는 1435만 기에 이르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46배, 서울시 면적(605.3㎢)의 1.2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 비율은 1954년 3.6%, 1991년 17.8%, 2000년 33.7%에서 2014년에는 78.8%로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 99%, 타이 90%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땅이 넓은 미국은 12%대이지만, 묘지 허용 면적은 1기당 3.3㎡미만이다. 매장 묘지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 명당과 길지를 선호하는 오랜 관습 때문으로 풀이 된다. 화장문화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를 후손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화장문화가 좀 더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

관혼상제 문화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조문화이다. 부조문화는 상부상조의 전통에 기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부조는 미풍양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부조는 쌍방간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640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7건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7만원 내외를 지출하였다. 경조사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1건 기준)은 20대가 6만6714원, 30대가 7만9641원, 40대 이상이 8만7480원이었다. 경조사 종류(복수응답)는 결혼식이 93.8%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친지의 조사(57.5%), 돌잔치(44.6%) 순이었다. 부조는 또 부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부조는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

한편 잘못된 허례허식은 과시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요는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라고 한다. 이 베블렌효과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일반계층의 사람들도 상류층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을 모방하여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모방소비를 할 경우 경제적 파탄 상태를 맞게 되고 이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실천방안 3 :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의 지양

잘못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과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 20% 줄이면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식량안보가 문제가 된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전 국민이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의 목표로 삼아 실천하여 식량 낭비를 현재의 반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60%를 넘게 되고 일본 정도의 식량안보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필요이상의 음식물 과다 섭취도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비만은 전 세계 사망원인의 5%를 차지하며 전쟁·테러, 담배(각 2조1,000억달러)와 비슷한 연간 2조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1980년과 2014년 사이 두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3%가

비만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 1억9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인구는 2002년 29%에서 2013년 31.5%로 증가하였다. 고도 비만(BMI 30 이상)은 2.5%에서 4.2%로 1.7배, 초고도 비만(BMI 35 이상)은 0.17%에서 0.49%로 2.9배 늘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고도 비만은 11년 전보다 2.5배, 30대는 2.7배 증가하여 20·30대 젊은 층의 고도 비만 증가 폭이 컸다.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비만과 관련된 질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관절염과 통풍, 수면 무호흡증, 월경불순과 불임, 각종 종양(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있다. 비만과 관련된 5대 질병(뇌졸중·고혈압·심장병·당뇨병·이상지혈증) 치료 비용도 2002년 8000억원에서 2013년 3조7000억원으로 4.5배 늘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이들 질환 치료비용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만 관련 질병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마. 풍요로운 문화사회의 창달

경제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은 가능하다. 행복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Needs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목표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비물질적 비경제적인 새로운 행복요소의 추가로 증진이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불교에는 一切唯心造 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통찰해 보이는 경계로, 마음을 통해 생명이 충만함을 깨닫는 경지(화엄경)를 가리킨다.

1) 실천방안 1 : 일과 삶의 균형 회복

이러한 경지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저성장시대에 나타나는 근로시간의 감소를 불안과 불만으로 불행하여지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자신의 성찰과 여가의 활용을 통한 문화생활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창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하우징아[14]는 그의 저서 「Homo Ludens - 유희에서의 문화의 기원」에서 인간의 본질을 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과거에는 놀이는 문화

14) Johan Huizinga (1872~1945)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 쪽이 상위개념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문화는 원초부터 놀이이며 놀이 속에서 놀이로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놀이라는 말은 단순히 논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킨다. 풍부한 상상의 세계에서 다양한 창조 활동을 전개하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스포츠, 문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에서는 김정운 교수가 놀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놀아야 창의성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놀이는 의사소통의 훈련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과 삶의 밸런스를 통해 삶의 질 즉 행복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놀이 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화랑도의 풍류사상과 접맥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최치원 선생이 기록했다는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 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집에서 효도를 하고 나아간즉 나라에 충성하고 억지로 일을 하지 않고 행동이 앞서고 말만 앞세우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유 불 선의 가르침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하였다.”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자라고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풍류도가 선비정신과 다를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2) 실천방안 2 : 문화서비스 산업의 진흥

이러한 건전한 놀이문화의 발전은 직접적으로는 문화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문화산업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문화산업의 일자리 종사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중적인 높은 수준의 놀이 문화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면 문화산업으로의 소득 흐름이 양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이는 문화산업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비슷하지만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음식숙박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유럽선진국의 경우 문화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15]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옥성수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GDP 대비 문화산업의 비중은 5% 내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5 결언

인류 사회 전체가 고도 성장하면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되고 환경문제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모멘텀을 만들기 이전에는 장기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경제사회 전반을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 대기업·수출중심의 성장구조는 유지하되 1차적 분배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서 파생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기 위해 돈 써가면서 땀 흘리는 것보다 적절히 먹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더 좋듯이 과도생산·과도소비가 아닌 저생산에 걸맞은 저소비 경제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도 저비용, 고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국민도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과 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물질만능의 소비를 통한 만족 추구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제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일등을 못하면 이등도 자살하는 과도한 경쟁 시스템 내에서는 일등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소득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모두에게 불행만을 제공할 뿐이다.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安居樂業’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즉,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신문화 융합 선진화의 실천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비정신에 본받는 도덕 사회를 지향한다. 미래 한국 사회의 모범적인 국민의 표상은 淸廉潔白한 마음가짐으로 公共秩序에 순응하여 따르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公平無私하고, 궁극적으로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세(弘益人間)로 살아가는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다시 살려나가는 것이다.

(1) 실천방안 1 : 전통적 윤리도덕의 부활
(2) 실천방안 2 : 부정부패의 척결
(3) 실천방안 3 :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전개

2) 저비용·고효율 복지인프라로 공감사회를 구축한다. 인구 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사망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福祉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1) 실천방안 1 : 새로운'경쟁 프레임'의 설정
(2) 실천방안 2 : 지속가능한 적정 '복지 인프라' 구현
    a. 사회안전망 체계화
    b. 생애주기적 노동·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
    c. 고용창출 성장지향적인 복지체계 구축
    d.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e.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3) 실사구시·경세치용의 절제사회를 만들어 간다. 과도한 경쟁과 인간의 탐욕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과당경쟁의 지배로부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사교육비 지양, 과소비 축소, 허례허식 일소 등을 통하여 검소한 풍요사회의 추구가 필요하다.

(1) 실천방안 1 : 사교육비 축소
(2) 실천방안 2 : 허례허식 척결
(3) 실천방안 3 : 음식쓰레기 및 과음 과식의 지양

4) 풍요로운 문화 행복사회를 추구한다. 경제적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현재의 물질적 수준에서도 더 높은 행복은 가능하다. 행복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Needs를 충족하고, 기대하는 목표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비물질적 비경제적인 새로운 행복요소(일과 삶의 균형)의 추가로 증진이 가능하다.

(1) 실천방안 1 : 일과 삶의 균형 회복
(2) 실천방안 2 : 문화서비스 산업의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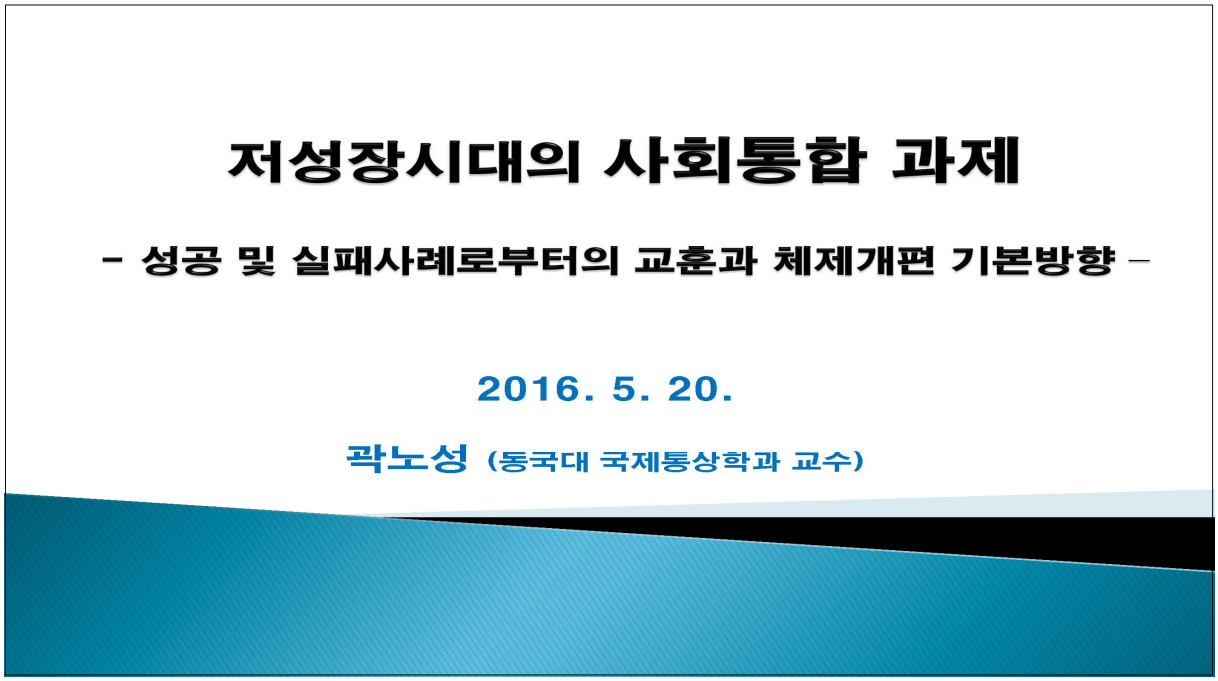
〈 참 고 문 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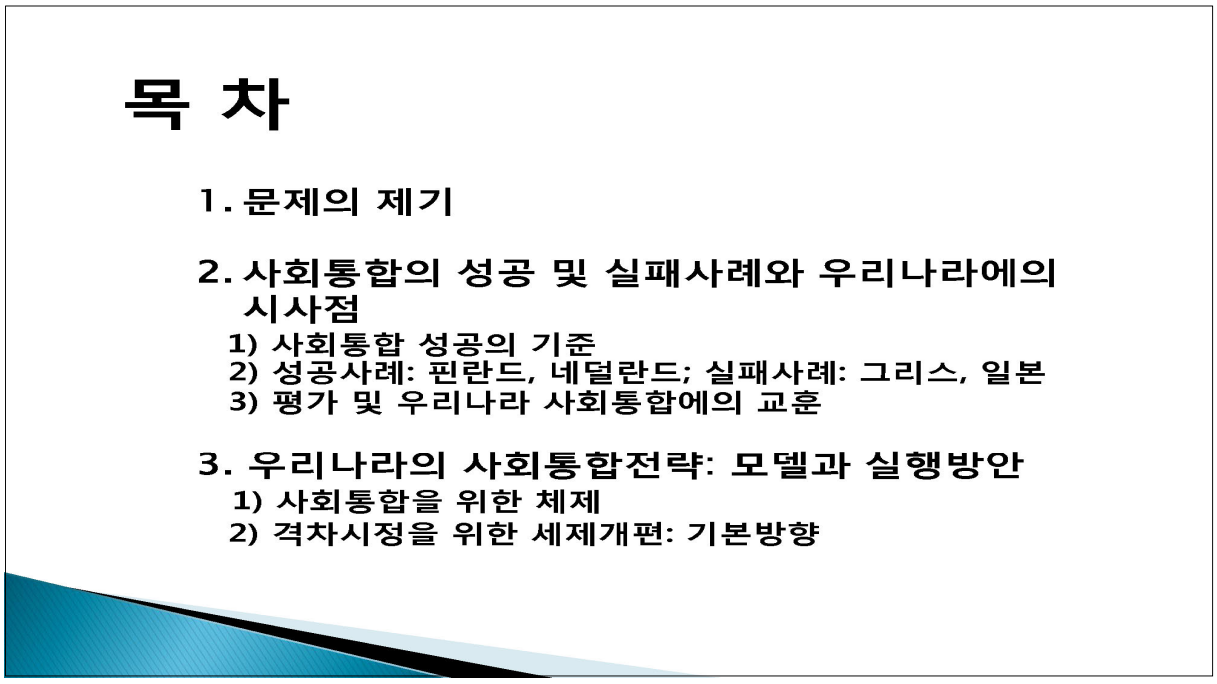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언』, 2014.
김용하, “정신적 풍요와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실천방안”, 한국선진화포럼, 2016.
김윤형,“다함께 가는 '착한'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 2015.
김정운, 『노는 만큼 성공한다』, 2012.
김형효, 『한국 정신사의 현재적 인식』, 1985.
로버트 스키델스키, 에드워드 스키델스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2013.
리처드 하인버그, 『제로성장시대가 온다』, 2013.
박우희, 이어령, 『한국의 신 자본주의 정신』, 2007.
세르주 라투슈, 『낭비사회를 넘어서』, 2014.
세바스티안 둘리엔 등 『자본주의 고쳐 쓰기』, 2012.
숀 아처, 『행복의 특권』, 2010.
앤서니 B. 엣킨스,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5.
에릭 브린요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시대』, 2014.
요르겐 렌더스,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2013.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2007.
이근식, 『죤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2006.
이종목, 이계윤, 『행복을 만드는 심리학 이야기』, 2009.
임마누엘페슬라이쉬,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2015.
제프리삭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2015.
조영탁,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2013.
최종락, 『미래의 세계』, 1994.
최종락, 『미래창조의 대혁명』, 2000.
탈벤 샤하르, 『완벽의 추구』, 2009.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2013.
필립 코틀러, 『다른 자본주의』, 2015.
한병철, 『피로사회』, 2010.
Gabor Dennis, 『The Mature Society』, 1971.
Gabor, Dennis and Colombo, Umberto 『Beyond the Age of Waste: A Report to the Club of Rome』1978.
Lee-Jay Cho, Yoon Hyung Kim, 『Korea's Political Economy』, 1996
Toshiya Minemura,『제6の波, 환경 자원 비즈니스 혁명과 다음의 대시장』, 2011.

발제문 2

저성장 시대의 사회통합 과제

곽노성 교수(동국대 국제통상학과)





1. 문제의 제기

불평등의 심화

80년대 이후 진전된 급속한 글로벌화와 기술변화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

- 소득불평등(Gini계수): (2006년) 0.306, (2009년) 0.314, (2010년) 0.31, (2013년) 0.302
  ☞ 2010년 기준: OECD(평균:0.305) 27개국 중 13위

-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또 다른 '격차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
  ☞ 총생산액중 노동의 몫(labor share)이 가장 빠르게 감소(The Economist, November 2nd 2013), 부(wealth)의 불평등이 매우 큼
  ☞ Piketti(2014)의 β값이 7을 상회하여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음.

-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노동인력 중 기술인력(skilled-labor)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wage premium)은 높아지고 비기술인력의 실질임금은 감소.
  ☞ 비기술인력의 경우 자동화로 인한 높은 실업률, 감소된 일자리 수요에 대한 경쟁 심화로 실질임금은 정체.

1. 문제의 제기

불평등의 심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며 한국경제의 공동체의식을 저해

- 불평등은 저성장 추세를 가속화시킴.

  ▪ 불평등에 의한 계층간 갈등의 증가는 공동체의식의 붕괴와 함께 사회불안으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어 우리경제를 고비용사회로 만들 위험을 크게 함.

- 최근 재벌3세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 금수저(silver spoon) vs 흙수저(scrappers) 논란은 청년세대들에 희망의 사닥다리를 차냄으로써 '될 대로 되라', '현재만 즐기자'는 포기자 양산

1. 문제의 제기

고령화·저출산과 저성장의 지속

고령화·저출산 추세

- 급속한 고령화는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초래

  ▪ 고령자의존비율(dependency ratio)은 2013년 16.7에서 2050년에는 7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이 고령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

- 출산율 또한 급격히 하락하여 1970년 4.5명 수준을 기록하던 총계출산율(TFR)이 2010년대 이후 1.2명대를 기록하여 서유럽국가는 물론 일본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저출산현상은 다가올 미래에 산업활동 참가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가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1. 문제의 제기

고령화·저출산과 저성장의 지속

저성장의 지속

- 1980년대 두자리수까지 기록하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로 급격한 감소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4%대를 기록하다가 2010년 이후 3%대의 저성장을 기록.

  ☞ 경제성장률 변화: (1980년대) 7.7%, (1990년대) 6.3%, (2000년대) 4.3%, (2010년대) 3% 수준, (2016년) 2%대 예상

- 낮은 성장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일자리 부족과 함께 국민경제 각 부문에 분배할 몫에 비해 부담은 커지는 부담사회(burdensome society)로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고령자와 청년세대간의 일자리 경쟁 즉,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
  ▪ 이는 부담률(dependency ratio)의 증가와 더불어 이중적인 갈등요인이 됨.

- 이러한 고령층과 청년층간 갈등은 노동과 자본(부)간의 갈등과 상승작용을 하여 심각한 사회 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며 성장률 저하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음(OECD, 2011)

1. 문제의 제기

사회통합의 문제 발생: 고부담·고비용사회(high cost economy)

소득 및 부(富)의 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붕괴시키고, 고부담(highly burdensome), 고비용 경제(high cost economy)로 만들 것임.

- 계층간 대립과 불평등은 사회불안을 가져오며 큰 리스크에 따라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일본과 같은 저성장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함께 계층간(세대간, 노동자본간) 갈등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2. 사회통합의 성공·실패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사회통합 성공의 기준

가. 정태적 기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계층간 갈등해소 체제의 구축여부

나. 동태적 기준: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의 가동성

다. 성과기준: 경제성장률, 실업률, 국가경쟁력 지표 등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는 1918년 내전(시민전쟁)과 이후 계속된 좌우대립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경험하여 타협과 사회통합 정신을 배양.

- 핀란드의 노사정 3자 모델(tri-partite model)은 1940년 소련과의 겨울 전쟁(Winter War)에서 노사가 전국민과 함께 단결하였던 경험에서 태동.
  - 당시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노사간에 체결된 '1월의 약속'(January Engagement)에서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를, 노동자는 사용자의 경영관리 및 처분권을 상호 인정한다고 규정함.
  - 1945년 체결된 최초의 3자 협약에서 핀란드고용주연맹과 핀란드노동조합연맹은 중앙단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핀란드 정부는 동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가 및 임금 규제관련 법적인 조치를 취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의 사회통합체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이하 FinEC)

- 핀란드는 사회적 동반자로서 노동자, 경영자, 정부간 협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왔으며 그 중심에 법적인 자문기구로서 FinEC의 역할이 큼.
  - 정부기관으로서 FinEC는 자문체(consultative body)로서 핀란드 경제일반에 관한 협의의 장(discussion forum)을 제공함.
  - 노동자그룹은 교사(Academia), 근로자(Laborer)와 사무직(Clerical)의 3개 연맹(union)으로 구성된 연합(federation) 체제임.
- FinEC는 1966년 『국가경제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68년 핀란드 노사관계모델의 기초가 되는 '1차 소득정책협약'을 이끌어 냄.
  - 이는 당시 경기침체와 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 및 대립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FinEC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노사정 3자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임금, 고용 등의 노동현안들과 경제사회정책은 패키지로 합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협약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의 사회통합체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이하 FinEC)

- 1968년 협약 이후 1980년까지 10차례에 걸친 협약 통해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 이행함.
  - 1990년대 초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와 당시 사회적 대화의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1993년 및 1995년 소득정책 협약 체결에 성공함.
  - 이는 폐기를 반대하는 서비스업 경영자단체와 동 협약의 체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을 편 노조를 활용하여 제조업 경영자단체를 설득함으로써 가능하였음.

- 이후 매 2년마다 정례적으로 소득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특히, 1998년 협약과 2000년 협약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단기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연금혜택의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약의 포괄범위가 전체 근로자의 90% 수준까지 확대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FinEC의 구성과 협의진행 체계

1) 조직

- 핀란드 정부, 중앙은행 및 사회적 동반자(노조, 경영자단체)간의 대화기구로서 FinEC는 총리(Prime Minister)를 의장으로 하고 20인의 고위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비공개회의를 통해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관한 정보 등 중요 경제정책 현안을 취급하는 법적인 기구임.
  - 1966년에 국가경제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법 시행령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2011년 개정됨.
  - 4년 임기의 위원은 정부에 의해 선임되며 의장, 부의장 및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됨(2014년 현재 의장, 부의장 및 17명의 위원)
  - 위원은 총리 이외에 최소 2인 이상의 정부요인(중앙은행은 별도)을 포함해야 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FinEC의 구성과 협의진행 체계

1) 조직

-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해관계단체는 경영(산업)자단체 3인, 노동자단체 3인, 농민단체 1인, 지방자치단체 1인이며 고위급의 공무원 2인과 총리부 3인을 영구 자문역(permanent advisor)으로 지명함.

  ▪ 현재 Alexander Stubb 총리가 의장, 재무부장관인 Antti Rinne가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농업부장관, 내무부장관, 경제부장관, 통신부장관 등 8명의 장관과 전문학자 연합(AKAVA), 산업연합, 경영자연합, 중앙은행총재, 노동조합중앙회장(SAK), 농림업인 중앙회장(MTK), 사무직노동자연맹(STTK)의장, 지방자치단체협회 대표, 중앙상공회의소 대표 등 17인의 위원

  ▪ 총리부 및 재무부 비서실장(State Secretary) 및 총리부 자문역 등 3인이 영구자문역으로 위촉되어 있음.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FinEC의 구성과 협의진행체계

2) 협의 주제와 기능

- FinEC는 국가경제상황 및 구조변화, 경제정책, 지역균형발전, 소득분배 등 경제전반에 걸친 의제에 대한 협의와 이들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촉진, 유로존의 공동통화정책 정보제공, 유럽사회경제위원회 및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
  ▪ 협의의제는 설립당시의 고용정책, 실업정책 등 좁은 범위에서 점차 확대되어 노동시장 정책, 거시경제정책, 연금제도, 사회복지정책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협의기구로 자리잡고 있음.(최근의 협의 성과: 2014년 9월에 합의한 연금개혁안)

3) 논의 절차

- FinEC의 회의 의제는 위원회 자체 토론, 사무국, 정부(혹은 EU의 요청)에 의해 제안되며 그 중 FinEC 사무국의 역할이 가장 큼.
  ▪ 사무국은 위원회 모임을 준비하고 위촉과제를 수행하며 정부부처, 핀란드 중앙은행, 대학 등 연구기관, 유럽내 여타 사회경제협의기구 및 EU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networking)을 유지함.
  ▪ 사무국은 사무국장, 연구조원 및 계약에 의한 주제별 전문가로 구성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FinEC의 구성과 협의진행 체계

3) 논의 절차

- 소득정책협약 논의절차 사례

① FinEC 사무국의 주도로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
- FinEC 내부전문가그룹 혹은 외부 전문가 및 연구자가 준비한 비전페이퍼 및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② 중앙단위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간 자율적인 임금가이드라인 교섭 진행
- 교섭이슈: 임금, 연금, 직업훈련 보조, 근로소득세 등

③ FinEC 주도의 임금과 정책 package 교섭
- 이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며 정부는 노사에 적정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할 정부정책 package를 약속함.

④ FinEC 주관으로 노사정간 합의 형성

⑤ 합의된 안에 대해 노사 각 단체에 의한 산하조직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

⑥ 합의내용에 대해 이행 점검(이행점검위원회 주관)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모델의 위기와 위기극복 사례(전략)

- 수출지향 국가로서 핀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이후의 경기후퇴(특히, 핀란드 주력 기업인 노키아의 구조조정)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 정부는 과세와 사회보장 정책(social benefit scheme)을 통해 동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함.

- 최근에는 Nokia에서 은퇴 혹은 기술축적을 한 engineer를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 산업디자인 등 벤처 창업을 하여 회생 움직임을 보임.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구축, 가동성, 성장 및 불평등 해소 등 성과

1) 체제의 구축(강건성)

- 핀란드는 1968년부터 국가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를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동 위원회의 무용론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체제로서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됨.
  - 총리가 직접 FinEC의 의장을 맡고 있어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노사의 다양한 단체들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inclusive) 또한 있는 체제임.

2) 가동성

- 19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중도우파정부의 노동시장 자유화와 실업수당 삭감 시도, 그리고 제조업 경영자단체의 소득정책 협약 체결반대와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1993년과 1995년의 소득정책협약을 창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체제의 가동성 또한 있음.
  - 이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 철회와 노조의 청년층 노동자 임금 감축 합의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었음.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구축, 가동성, 성장 및 불평등 해소 등 성과

3) 성과

-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 1968년 1차 소득정책협약의 성과
    (1961~68) 3.9% → (1969~73) 6.7% (참고: OECD 평균 4.9%)
  -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전후
    (1991년) -7.5% → (1995) 5% → (2000) 5.2% → (2004) 3.5%

- 실업률
  - 1968년 1차 소득정책협약의 성과
    (1961~68) 2.4% → (69~73) 2.3% (참고: OECD 평균 3.2%)
  -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전후
    (1990년) 4.0% → (1994) 17% → (1998) 11.3% → (2001) 9.1%

- 국가경쟁력 지표
  - (2001년) 1위 → (2002) 2위 → (2003~2005) 1위 → (2006) 2위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핀란드

핀란드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구축, 가동성, 성장 및 불평등 해소 등 성과

4) 핀란드 사례로부터의 교훈

- 성공요인
  - 1918년 시민전쟁에 의해 3만 여명의 동족살상 경험과 이후 계속된 좌우대립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타협과 사회통합정신의 밑바탕이 되었음.
  - 핀란드 장래를 위해서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1987년 사민당과 국민연합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경험이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됨.
  - 핀란드 사회통합체제는 공동체의식의 기반하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족해낸 모형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공모형이 됨. 즉, 사용자의 이해관계인 비용경쟁력 확보, 근로자 실질소득 증가, 정부의 지속가능 성장을 양보와 타협으로 달성

- 교훈
  -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의 오랜 지배를 받았고 독립과정에서 내전과 좌우대립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경험하여 타협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라는 공동체 정신의 기반이 되어 있음.
  - FinEC는 총리가 의장이 되어 위상이 높으며 협약체결은 당사자간(노조와 경영자단체)에 이루어지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역할하며 합의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패키지 합의를 가능하도록 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네덜란드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체제

- 네덜란드는 조합주의(corporatism) 전통을 가진 대외의존경제로서 1982년 노사간 Wassenaar 협약을 통해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치유하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세계경기후퇴기 닥친 위기에 직면하여 1993년 12월 노-사간 다시금 New Course합의를 만들어내어 '네덜란드의 기적' (Dutch Miracle)을 이룩함으로써 조합주의 전통을 살려낸 국가임.
  - 최근(2013년 4월 11일)에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유럽통합 등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압력과 인구 고령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 대내적인 변화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타협을 다시 이루어낸 바 있음.
-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3계층(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수준)으로 구성된 협의경제(Consultation Economy)로서 노동재단이 사회경제위원회(Social and Economic Council: 이하 SER)를 통하여 협의를 창출해내는 구조임.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네덜란드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체제

- 기업수준은 work council에서, 산별노동조합연맹은 노동자 80% 참여율로 500개 산별 노동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s)을 창출해내며, 국가수준에서는 노동자 및 경영인협회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노동재단(Labor Foundation)이 사회경제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정부와 협의함.
- 협의는 1937년 이래 지속되어온 확대적용기준(extension provision) 즉, 산업별 중앙 단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참여하지 않은 모든 노동자 및 경영인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 SER은 1950년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 및 의회의 자문기구로서 경영자대표(11인), 노동자대표(11인)과 독립적인 전문가그룹(11인: 국왕이 임명하여 Crown Group이라 부름)으로 구성되는 3자간 자문기구

- 주로 국가의 장기적인 주제와 개혁을 다루며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으로 운영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가동성과 성과(불평등 해소)

- 네덜란드는 1970년대 경제위기를 1982년 Wassenaar 협약을 통하여, 80년대 말의 세계경기 침체기에는 1993년 말 New Course합의를 통하여,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경제침체기에는 2013년의 Prospects to 2020 합의를 이루어 냄.

- 이를 통하여 9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도 동 체제는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네덜란드 모델은 노사간 타협을 통하여 노동시간 축소 및 임금인상 자제와 고용안정을 이룩하고 정부의 탈규제(deregulation) 조치와 지도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해냄으로써 고비용경제(high cost economy)를 치유하는 성과를 보임.

- 네덜란드에서 사회통합체제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3가지 요인
  ① 평등주의적 조합주의(egalitarian corporatism)
  ② 민주주의 전통
  ③ 당사자들의 위기에 대한 공통인식
- 이로부터 각 당사자들은 한계를 정해 주장하고, 노동자-경영진 간 타협(trade)이 이루어짐.
- 상기 모델은 네덜란드 경제의 글로벌화 이전 즉, 1995년까지 잘 기능하였음.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성공사례: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가동성과 성과(불평등 해소)

- 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제근로자의 양산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과 유럽통합으로 2004년 이후 동유럽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동 모델의 작동에 이상이 발생함.

  ▪ 1999년 유연노동직 안정에 관한 법률(Law of Flexible Job Security) 제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직업안정을 확보하고, 드디어 2013년 4월 연립정부의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주관 하에 Prospects to 2020을 도출해냄.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그리스

그리스는 탈세와 정실주의(favoritism)가 만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과 많은 부문에서 양극화가 나타남.

▪ 한편, 2000년대에 들어 정당들은 합의창출을 위해 노력. 2012년 재정위기로 현재 3개(tri-partite)의 국제금융기구(EC, IMF, ECB)에 의한 처절한 개혁이 진행중임.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하 OKE)

- OKE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를 모델로 1994년 설립된 3자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2001년 헌법이 인정한 국가기구가 됨.
  ▪ 3그룹은 경영자/기업가그룹, 공공/민간근로자그룹 및 기타그룹(농민, 자영업자, 소비자, 환경보호단체, 장애인단체연합, 양성평등단체 및 지방정부)임.
  ▪ 그리스 헌법 82조 3항은 OKE의 임무를 "일반정책 및 경제사회정책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수행하고 정부안 또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생성"하는 것으로 규정
- OKE의 목표: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통해서 사회전반 혹은 특정 사회그룹의 관심사안에 대한 상호수용가능한 입장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입장을 고려한 주장과 제안의 제시를 통하여 경제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의 형성
  ▪ 이를 통해 사회적 이득을 최대화하고 정부 혹은 의회의 의사결정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그리스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하 OKE)

- 그리스 OKE의 의견(opinion) 생성절차

① 자체 혹은 관련 정부 및 의회의원의 입법 초안의 입수

② OKE 부총장(Vice President)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임시작업 위원회 구성(전체회의 위원 6인(각 분야 대표 2인씩), 각 분야에서 지명하는 3인의 전문가, OKE 과학자문위원 1인).

- 중대한 사안일 경우 위원수는 확대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혹은 기관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3~4회의 회의를 거쳐 확정한 동 위원회의 결론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초안을 전체회의에 송부하며 전체회의에서 동 제안을 토론한 후 최종의견을 냄

- 참석위원의 1/3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지지를 얻은 소수의견은 최종의견에 첨부(cited)

④ 최종의견은 관련 정부부처 혹은 입법을 제안한 의원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고려할 추가 정보 등의 필요를 이유로 동 의견을 회송할 수 있음.

- 또한 최종의견은 관련 입법의 토론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의원들에게 회람
- 전체 관심사안 및 지속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OKE가 공공대화를 위한 이벤트를 조직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그리스

그리스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의 가동성, 강건성과 불평등 해소

-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사회통합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비용을 감축하고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함으로써 위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그리스의 경우 2011년 재정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융구제 3기관(IMF, ECB, EU집행위; 이하 구제Troika)과 합의를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전의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

- 구제 Troika로부터의 구제금융이전인 2009년 3월 그리스 OKE가 이루어낸 3자간 합의인 국가사회발전계획(National Social Development Plan)은 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 이행이 정지되었고 사회적 대화는 정부와 구제 Troika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로 대체됨.

- 이에 따라 2010년의 연금개혁안은 위원회의 내부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데 그치고 협의 과정에 이르지 못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그리스

그리스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의 가동성, 강건성과 불평등 해소

- 공공부문의 임금감축으로 여러 차례의 전국적인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는 등 긴축 조치의 도입에 따라 현재 그리스는 높은 사회적 긴장상태에 있음.
  - 그리스 노조의 공식항의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그리스 정부에 대해 이에 대한 반복된 침해와 포용적인 사회적 대화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함.
- 결론적으로 그리스는 사회통합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기 전에 경제 위기를 당하여 체제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위기로 그리스 OKE 예산이 감축되는 등 경제위기는 현재 OKE의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OKE에 시민사회기구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최근의 법 개정으로 대의원수를 60명으로 증가시킴(기존 48명)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일본은 개인의 주장보다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며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 강한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달리 효율성보다는공평성을 중시하고 안정과 안심을 추구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가치를 보유

- 그러나 1990년대 초 거품경제의 붕괴이후 이전에 존재하였던 중층적인 보호막이 엷어지면서 '격차사회'문제가 발생함.
  - 이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높았던 사회협약 창출능력도 1990년대 이후 현저히 떨어진 상태임.
-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 이중적인 구조로 경직성이 강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 이와 함께 정규직내에서도 이동, 채용, 고용조정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평가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체제: 정노사(政勞使) 회의

- 이해관계당사자로서 노사정 합의 도출을 위한 체제로 2000년 이후 일본은 정노사 회의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함.
  - 조정자로서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인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고 압박하는 역할
  - 각 측의 대표적인 단체: 노동자측 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 렌고),
    사용자측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 게이단렌)
- 정노사합의의 예: 2002년 3월의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기본입장』, 2009년 3월의 『고용안정·창출 실현을 위한 정노사합의』, 2013년 12월 20일의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향한 대처』 등
  - 일본의 정노사합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합의당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노사정을 대표하는 다양한 당사자가 합의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짐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체제: 정노사(政勞使) 회의

- 일본의 사회통합 체제의 작동과정 및 특징과 그 내용(2013년 합의창출 과정)
  - 2차 회의부터 3, 4, 5차 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합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확대하는 눈굴리기(snowballing) 전략으로 사회협약의 유효성을 확보
  -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당사자 대표를 다양하게 포섭하여 참여시킴 (2013년의 경우 임금인상 유도를 위해 사용자대표가 그 대상).
  - 합의결과물인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향한 대처』의 주요 내용:
    1) 임금상승을 위한 노력
    2)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처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제고·처우개선을 향한 노력
    4) 생산성 향상과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일본의 임금결정 사회협약: 사례연구

- 전통적으로 일본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제 => 1990년대 초 복합불황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시간급 혹은 연봉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증가.
  -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 및 많은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연공임금제를 유지
- 또한 임금체계에 있어 연공임금제의 정규직과 시간급의 비정규직간에 이중구조가 형성됨.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일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연공임금구조의 장기고용 노동자들이 기업특유의 인적자본(firm-specific capital)으로 고착됨에 따른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과 기업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에 따른 내부노동이동의 경직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노동의 한계생산성보다는 어느 직렬로 채용됐는지 여부가 임금 및 직업안정성의 결정요인이 되며 산업간 노동이동의 경직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처우라도 한 직장에 머무를 수 밖에 없어 외형상 장기고용의 형태로 되어 있음.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일본의 임금결정 사회협약: 사례연구

- 일본은 파업, 직장폐쇄 등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대신 기업 혹은 사업소단위의 노사협의체를 통하여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경영 및 생산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음.
  - 노사협의의 대상은 임금, 정년, 퇴직수당 및 연금기준, 휴가,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경영기본계획, 채용 및 배치기준, 기업조직의 신설·변경 등 협의 폭이 대단히 넓음.
- 노사간의 임금, 노동시간 조정 등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은 1955년 이래 춘계임금투쟁(春闘)라는 이름으로 매년 4월경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름과 달리 노사간의 단체교섭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1990년대 이후 임금인상 타결이 되어도 실제 인상수준은 그 이하인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후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명목 임금이 하락하여 왔음.
  - 그러나 2012년 말 아베정권 출범 이후 금융완화로 2014년 춘투에서는 일부 대기업에서 본봉인상을 합의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일본의 임금결정 사회협약: 사례연구

- 일본은 1960년대 이래 전기업, 철강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교섭 즉, 통일 교섭을 진행해온 전통이 있는데 본 방식은 2014년의 춘투에서 본봉 인상을 이끌어내는 공헌을 함.
  - 이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경영자측에서도 합의에 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임.
  - 예를 들어 600여개 기업의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덴기렌고(電氣連合)가 기업군별(예를 들어 대기업, 중견기업 등)로 인상요구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경영진 측에서는 개별 기업별 협상시 자신의 기업만이 불리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게 되어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됨(철강, 조선업계도 같은 방식으로 타결).
  - 그러나 이는 정규직에 한정된 것이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산업내 기업간 실적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통일교섭 방식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일본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구축, 가동성과 불평등 해소

- 일본은 정노사회의를 통해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의 주체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정부가 노동자 및 자본가의 대표들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체제가동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본의 의사소통이 조직간은 물론 조직내 횡적인 소통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체제는 '그들만의 리그'로 가동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의사결정 집단에 속하지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을 이른바 '격차사회'로 만듦.
  - 특히, 1990년대 초 이후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용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평등과 이에 따른 인적 자본형성의 장애는 계층간 갈등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고비용(high cost) 사회화할 가능성이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것임.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실패사례: 일본

일본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체제구축, 가동성과 불평등 해소

- 일본의 사례로부터의 교훈: 집단간은 물론 집단내 부서간 의사소통의 부재는 집단외부구성원과의 단절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체제 순응적인 국민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다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등은 국가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큼.
  ▪ 실제로 현재도 일본의 국가부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여 최근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1수준으로 강등.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평가 및 우리나라 사회통합전략에의 교훈

가. 평가

사회통합체제의 평가기준

1) 일국경제의 주체인 근로자, 경영자, 정부간의 협력을 통하여 고비용과 실업을 방지하고, 격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 안정된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여부(정태적 기준)
2) 경제상황의 변동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동성 여부(동태적 기준)

- 상기한 두 가지 평가기준의 효과성은 각국 경제의 경제성과 즉, 성장률, 실업률 및 국가경쟁력지수 등에 의해 판단가능

사례 대상국의 사회통합체제의 평가

- 핀란드: 체제구축 ○, (위기시) 체제의 가동성 ○, 성과 ○(성장률, 실업률, 국가경쟁력, 불평등도 감소)
- 네덜란드: 체제구축 ○, (위기시) 체제의 가동성 ○, 성과 ○
- 그리스 : 체제구축 ○, 체제의 가동성 Δ, 성과 X
- 일본 : 체제구축 ○, 체제의 가동성 Δ, 성과 Δ

2.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평가 및 우리나라 사회통합전략에의 교훈

나. 우리나라 사회통합전략에의 교훈

사전적인 체제(institutions)의 구축과 이를 가동할 수 있는 기제(mechanism)의 정비가 중요

- 성공적인 사회통합체제를 갖춘 사례국가들의 특징은 위기에 직면하여 근로자, 경영자, 정부의 3자간 타협을 통하여 위기 극복체제를 가동할 수 있었음
-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비용, 불공정, 불안사회로부터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이 필요

위기발생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한 공통인식이라는 기본요건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협약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첫째,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의 확대(네덜란드의 Crown회원의 예)로 신뢰성 확보
- 둘째, 의제 취급범위의 포괄성(노동관련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정책 포함)으로 거시적인 맥락에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
- 셋째, 합의내용 이행 또는 답변의 의무화(핀란드의 경우 법적으로 합의내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의무화 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는 관행적으로 3개월 이내 정부 답변)로 불확실성을 제거
- 넷째, (정권교체와 관계없는) 정부 리더의 지속적인 의지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가. 현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 및 임금관련 사안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는 기구
-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념, 계층, 지역 및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직으로서 자문기구

나. 문제점

이들 위원회는 의제 취급에 있어서 의무적(mandatory)이지 않으며, 대표성이 부족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민주노총은 불참)

- 법적으로 주어진 미션이 없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의회(정당)와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리더의 관심여부에 따라 기능의 작동 여부가 결정됨
- 또한 리더의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취급하는 사안의 범위가 한정적임

새로운 통합모형은 포괄적인 주제를 취급하는 법률적으로 미션이 주어진 기구로서 리더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함

-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주요 구조변화 요인을 취급하는 기구
- 리더의 참여가 법으로 의무화된 기구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가. 모형의 특성

체제의 기본구조, 협의의제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성공적인 국가들의 사회통합 체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 필요.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기본체제로서 경제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를 취급하는 정부 및 의회의 법적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체제(가칭, "한국사회경제통합위원회")를 제안

- 국민의 높은 정부의존과 정부불신, 정치과잉과 정치불신의 동시존재라는 모순적 특성 고려.
- 본 모델은 법률에 의해 역할이 규정되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모형을, 의제 취급범위의 포괄성 면에서 핀란드 모델을,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본, 핀란드 모델과 같음.

특히, 통합체제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의 이행과 그 집행의 보장 및 법적 안정성의 부여를 위해 입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의원내각제 구조인 네덜란드와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입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합의내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나. 기본구조

1) 법적 성격: (가칭)『한국사회경제통합위원회법』에 의해 설립·운영하는 정부 및 의회의 자문기구

- 동법은 위원회의 역할(의무),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함.

2) 위원회의 의무(취급범위 포함):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동향, 사회구조 변화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의제에 대한 사실의 확인, 분석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능, 상기 사안에 대한 각 분야별·계층별 협의기능, 합의안 도출 기능

- 의제 취급의 범위에 있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의제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본 모형은 핀란드모형과 유사

3) 회의방법: 정부·의회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사회 전반 의제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2개월에 한 번의 정례회의와 필요시 정부 및 의회의 제안에 의한 임시회의로 구성함. 위원회 의제의 채택 및 합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함.

- 의제 채택, 토의 및 협의 각 단계별 기한을 두어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 제고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나. 기본구조

4)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노·사 및 분야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함

- 핀란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20인의 위원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경영자대표 11인, 노동자대표 11인 및 국왕이 임명(Crown Group)하는 독립적인 전문가그룹 11인 총 3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정치과잉 및 정부의존 경향이 강하므로 정부 및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국회내에 사무국을 두고 경영자대표 10인, 노동자대표(산업별 노조포함) 10인, 대통령 지명 전문가 10인과 국회 지명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가그룹 20인 총 40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회의 의제에 따라 관련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현안의 분석, 전망과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위촉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일본 정노사회의 사례).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나. 기본구조

5) 위원의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방법: 최고 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원장인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참여위원들의 협력을 촉구하여 합의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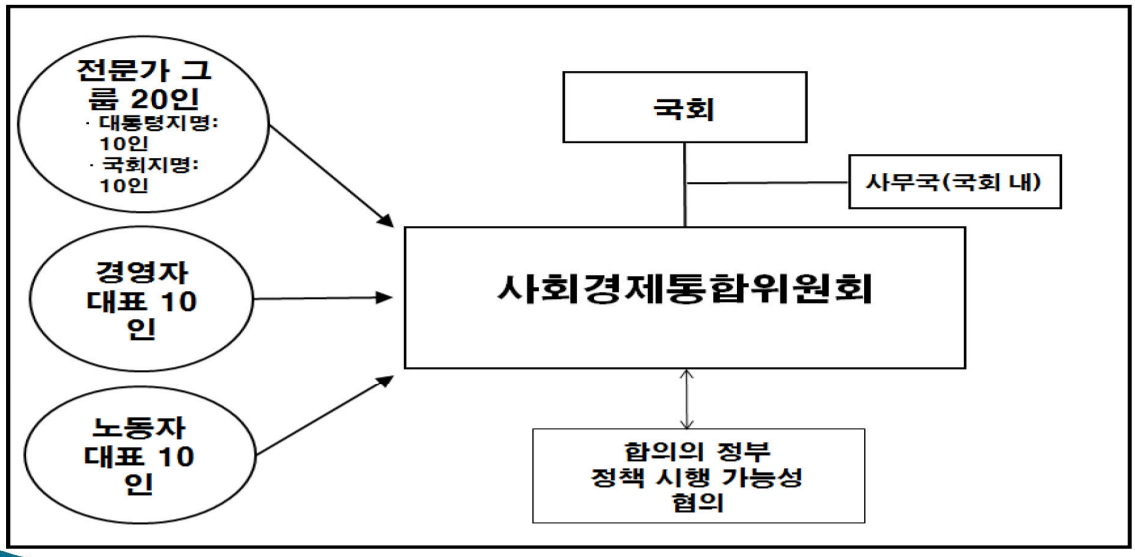
- 노동자대표는 연합회(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산업별노조, 직능노조 등으로 구성하고, 경영자대표는 중소기업대표를 포함한 분야별 각 단체로 구성함.

- 우리경제의 정치과잉과 정부의존 경향을 반영하여 전문가그룹(네덜란드 및 일본의 경우 주로 교수)의 지명은 대통령이 10인, 국회 10인으로 하도록 하여 해당 의제에 대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분석과 해결과제를 제시함.
  - 해당의제에 대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분석은 합의유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임명에 신중하여야 함.

- 이와 함께 합의된 사항에 대한 정부정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과정에서 관련부처 및 국회와의 상시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필요시 해당분야의 정책의제들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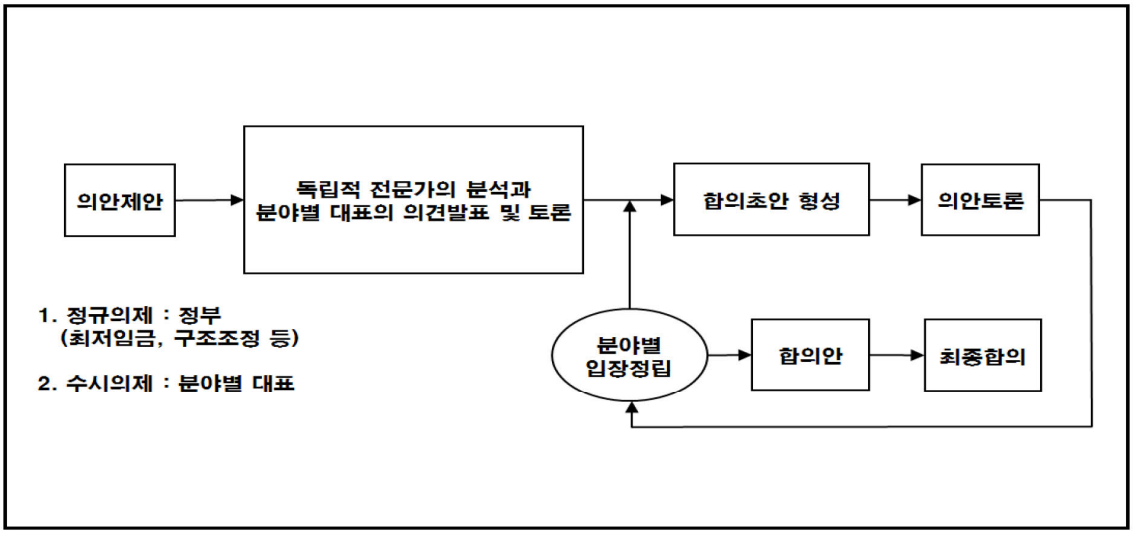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한국 사회경제통합위원회의 기본구조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의안 토론과 합의과정 : 단일협상안(single negotiating text) 절차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다. 실행방안

1) 위원회 조직의 정비

- 본 위원회는 저비용경제로서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우리경제가 계층간·세대간 갈등과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 및 공동체 의식의 상실로 고비용 경제·불안한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임.
- 이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현 노사정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통합하고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강화하여 조직을 신설함.

2) 신뢰의 구축방안

- 구성원간 신뢰(trust)는 조직의 목표에 대한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하며 참여자의 전문성과 열정, 성실한 태도 등으로 확보됨.
  - 따라서 노와 사가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자별 대표성을 확보
  - 이를 위해 분야별 각 대표들을 공정한 비율로 모두 포괄하며 위원의 선정에 자주성 부여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다. 실행방안

3) 참여자 세력불균형의 해소방안

- 세계화의 진전으로 노동의 세력은 약화되는 반면, 탈출옵션(exit option)을 가진 자본은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양자간 세력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세력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노동과 자본에 동일한 숫자의 위원을 배정하여 동등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한편, 자본가에게는 최대관심사인 경영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제로는 특수 지위의 주주 및 특별의결권 주식의 창조(스웨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 의한 우량기업 주식보유의 확대 등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2) 격차시정을 위한 세제개편:기본방향

가.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Income Tax Credit)의 확충

- 이를 통하여 기업에 고용부담을 줄이고 비 기술인력의 소득보장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음.

나.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활동에 대한 과세강화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탄소 배출과 공해유발 행위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활동의 효율화와 세수 진작

다. 과세의 중점을 소득세로부터 소비세로 전환

- 이러한 방향전환은 불평등 문제와 재정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MEMO



MEMO



MEMO



MEMO



MEMO

